

Q&A
한반도 긴장의 원인과 대안

▶ 6 ~ 7 면

의료, 철도, 가스 ...
공공서비스
지키려는 투쟁

▶ 8 ~ 9, 16 면

마르크스주의
노동계급과
프레카리아트

▶ 14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터리로 드러난
긴축의 경제학

▶ 11 면

5주년
촛불항쟁의
의의와 교훈

▶ 12 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민식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8

Left21.com

제103호 | 2013년 4월 29일 ~ 5월 12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부패가 난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본격화를 앞두고 “한국판 대처”가 되라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안고 집권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을 이뤄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복지 열망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 직후 기세가 오른 지배계급은 곧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연초부터 한국 경제 위기 조짐이 커지고, 곧이어 안보 위기가 불거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결국 복지 공약 먹튀는 취임도 하기 전에 박근혜 통치의 정당성 위기를 불러왔고, 취임식 전후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무능·부패·극우 인사 임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커지면서 장·차관급 내정자가 일곱 명이나 중도 사퇴했다.

새 정부가 집권 초 내각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자, 집권당도 흔들렸다. 보수 언론끼리도 불협화음을 냈다. ‘별장게이트’에서는 김·경 갈등도 드러났다.

이 와중에도 박근혜는 꾸준히 우파 본색으로 기울어 왔다.

국가정보원 등 억압기구에 육군 장성 출신과 공간검사 출신들을 임명하면서 좌파 단속을 예고했고,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경제 살리기라며 가면을 벗기 시작했다.

▶ 3면으로 이어짐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의료보험제도 → 사회주의적 정책, 좌파”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작성한 메모에서

“안티가 가장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홍준표, 박근혜를 보고 잘못 배웠군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경제에 ‘특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일본 주간지 〈주프레뉴스〉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주식 매수를 권하며

“동성애는 방종이고 타락이죠.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치료해야 됩니다. … 권총이 생명을 위협한다면, 동성애는 정신을 위협합니다.”

한기총 회장 홍재철의 역겨운 선포

“국민이 이제 전쟁 나도 여기서 결판 내야 한다는 각오[를 했는데]… 막중한 기회를 선부른 대화 제의로 날려버린 것”

〈조선일보〉김대중의 아쉬움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폭격하라. … 선제 폭격은 많은 생명을 살리고, 동맹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쉽지 않은 평화를 유지하는 길”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린 미치광이 글

“무슬림은 악마다. 다 죽여야 한다.”

미국 〈폭스뉴스〉의 극우 평론가 에릭 러시

“책을 들고 있는데 승무원이 와서 스스로 부딪친 것”

집지로 승무원을 폭행한 뒤 변명하는 포스코에너지 전(前) 상무

“노동법 준수”

현대차 양재동 본사에서 비정규직 집회를 가로막은 구사대가 두른 어깨띠

“이건희 회장은 어디로 갔지를 알고, 이기겠다는 마음이 강한 분이랍니다. … 최고의 자리는 힘들고 외로운 자리예요. 잘할 수 있게 박수를 보냅니다.”

KBS 〈어린이 독서왕〉이 선정한 책 중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 가판은 5월 13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1(연호아사비빌딩)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정문 건너편	14:45~15:45
격주 화요일 (다음 가판은 5월 14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19:00~20:00
격주 수요일 (다음 가판은 5월 15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 가판은 5월 16일)	
부산 서면 주디스테파워백화점 앞	19:00~20:00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6월 13일 ~ 15일)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1층	월요일 11:20~12:20 (이화여대는 매주 공개판매를 진행합니다)
인천대 학생식당 입구	화요일 12:00~13:00
국민대 법대 1층 식당 앞	화요일 12:00~13:00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앞	화요일 11:30~12:30
부산대(부산) 정문 앞	화요일 11:50~12:50
고려대(안양) 정경대 후문	화요일 16:30~17:30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수요일 11:45~12:45
충남대 공대2호관 앞(쪽문)	수요일 12:00~13:0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이주노동자 차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이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존재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공장 한 편에 층층이 컨테이너를 쌓아 열악한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끌어내 부려 먹으려는 기업주, 사표를 쓰려 하면 본국으로 추방한다고 협박하는 기업주에게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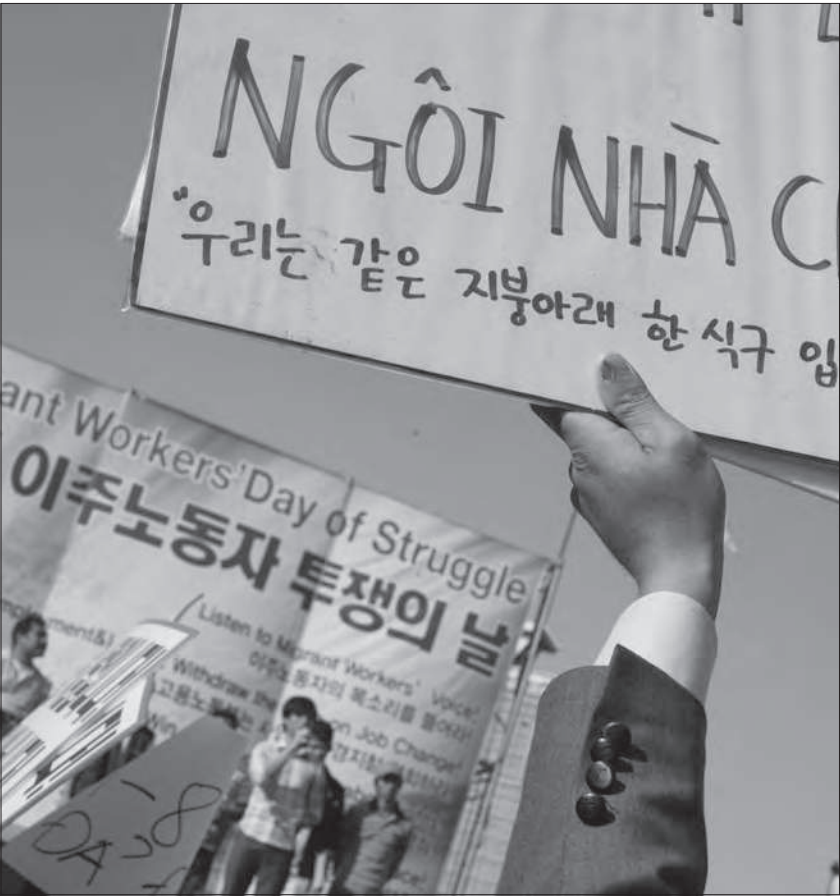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여러득을 본다. 무엇보다 경제의 부침에 따라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데다 낮은 임금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차별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처지 때문에 원치 않아도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강도를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또 최악으로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파업 파괴자 노릇까지 하도록 강요당한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 사이에 깊은 골이 파이고 적대감이 생기곤 한다.

흔히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단결은 너무 어려우니 달리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기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을 일시적으로 막을



이주민 차별에 반대하며 국제적·계급적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가하는 구조 변화 압력 속에 정부·기업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끌어 모으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노동자들의 단결은 노동운동의 대처 방식에 따라 발전하고 촉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내

선진 투사들은 투쟁 속에서 중요한 선례들을 보여 줬다.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이주민이 한국에서 겪는 체계적 차별과 이주 규제에도 반대해야 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 110만 명 중 압도 다수는 노동자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주민들의 체류 자격이 심각하게 후퇴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시행한 입국 외국인 얼굴과 지문 정보 수집은 이주민들을 색출해 추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심지어 난민들이 자국의 박해를 피해 빠져나오는 데 사용한 가짜 여권 이력을 찾아내 난민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 어떤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공장에 취업해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이라며 난민 신청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도 속출한다.

중국 동포 중 일부는 온갖 수모와 차별을 감수하고 어렵사리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해 체류할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이 비자를 가지고 식당, 건설 현장,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추방이다.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온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업장 이동 자유도 없다.

결혼 이주민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라는 지독한 괴롭힘을 당해 왔는데, 이제는 과분한 복지를 누린다는 공격까지 받는다. 이들 가정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인데 말이다.

정부는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을 법으로 뒷받침한다.

이주민 운동 내에서는 정부의 이런 총체적 공격에 맞서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는 인식과 모색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는 이주민 차별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실천이 돼야 한다.

이정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역겨운 공격을 누가 부채질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이 법안을 철회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허용법”이고 “주체사상 찬양법”이라고 길길이 날뛰는 우파의 황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만이 “종북 게이 의원”이라는 우파의 비난 포화 속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파의 반발과 민주통합당의 우유부단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비슷했다. 당시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은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성적 지향, 학력 등의 차별 금지 사유가 삭제되며 “누더기”가 돼 버렸다. 이 법안은 논란 속에서 진통을 겪다 결국 폐기됐다.

이것은 단지 “이성적으로 토론이 어려

운”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의 횡포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2007년에 차별금지법에 가장 강력히 반대한 세력은 바로 경총과 재계였다.

경총은 학력과 병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며 반대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따라서 다양한 억압과 차별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토양 속에 뿌리를 깊게 내렸고,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한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논리에 서도 엿볼 수 있다. 우파는 차별금지법이 ‘국가 기강’을 해치고 ‘가족 가치’를 훼손한다고 얘기한다.

무엇보다 차별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단결을 저해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노동계급의 불만이 커지는 시기에 지배자들은 보수적 이

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이주노동자 때문이라든지, ‘종북좌파’와 동성애자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주장은 박근혜 정부가 일찌감치 얘기한 “법과 질서”와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민의 호민관

이렇듯 차별이 피억압계급을 분열시킨다는 점 때문에, 경제 위기 고통 전가와 착취와 궁핍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억압과 차별(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등)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자 단결은 남성과 여성,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등 다양한 집단들을 분열시키는 모든 차별에 맞설 때만 이룰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것에 적극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정년 연장은 노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등 돈 들어갈 걱정이 산더미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몇 년이라도 더 안정된 직장에 다니길 원하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이간질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청년 일자리도 늘리고 정년도 연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연장안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첫째, ‘정년 연장 의무화’라고는 하지만 기업이 이를 어겼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주들이 따르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매우 우려했던 대로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할 방안을 열어 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이 안을 추진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를

비판하지 않는 것도 아쉬운 일이다.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동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을 전전하는 고령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신용보증기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58세가 되면 임금의 35퍼센트만 받는다.

민주노총이 요구했듯 정년 연장이 “좋은 일자리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고 실효성 있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또,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도록 연금 수급 연령을 낮추고 연금 지급액을 대

폭 늘려야 한다.

애초에 정년이 존재하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과, 정리해고와 조기 퇴직 강요에 맞서는 투쟁이 함께 건설돼야 한다.

정선영

임금피크제
기업이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준다는 핑계로, 정년 전 일정 기간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박근혜 취임 두 달을 돌아 보며

벌써 드러난 강성 우파 정부의 허점과 모순

▶ 1면에서 이어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운운하던 박근혜는 지난 두 달 동안 ‘한미동맹 무한신뢰 프로세스’만 가동해 왔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내각 구성을 마친 박근혜는 이제 공세를 본격화하려 할 듯하다. 재보선에서 본전치기를 한 집권당은 그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박근혜를 초유의 ‘임기 초 위기’로 몰아 넣은 요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이를 수사하던 경찰의 은폐 추문은 새로운 위협성을 보여 줬다.

이명박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가 박근혜 당선의 정당성 위기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 연장을 위한 이명박근혜 동맹 탓에 자칫 전임 정부 흔적 털기가 현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반사이익

‘별장게이트’ 사건처럼 이 의혹들 수사 자체는 또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부패 추문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추문 덮기가 계속될수록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대외 환경도 여전히 모순을 낳고 있다. 중국과 결코러워지더라도 전통적 한미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재벌 독재화’ 취임 두 달 만에 박근혜의 거짓말들이 다 들어나고 있다. 4월 26일 현대차그룹 양제동 본사 앞 비정규직 집회

[일]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번엔 일본 지배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관련기사 7면](#)

이런 상황에도 박근혜가 더 군색한 처

지로 내몰리지 않고, 4·24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본전’을 유지한 데에는 민주당의 무능이 크게 기여했다.

박근혜가 복지 먹튀로 위기를 겪고 있

는데, 민주당은 이를 폭로하기는커녕 대선 때 내놓은 ‘진보적’ 강령과 정책을 죄다 삭제하며 박근혜와 우경화, 공약 먹튀의 보조를 맞추려 한다.

그래서 집권당의 위기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혼란 패턴이 도리어 뒤집혀서 나타나고 있다. 4·24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후보를 낸 곳 모두 크게 패했다.

반면 “새 정치”를 내세운 안철수가 부상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서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안철수가 신자유주의 우파 정부에 맞서는 정치적 구심이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안철수의 ‘새 정치’는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도무지 실체를 알 수 없는 구호의 대명사가 돼 있다.

이런 점에서 진보진영의 분열과 위기 지속은 아쉽다.

박근혜와 기성 정치권의 위기를 이용해 진보 대안을 제시하며 노동운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기회를 잘 잡지 못 하고 있다.

우파는 ‘종북’ 마녀사냥 등을 이용해 진보진영의 분열과 반목을 계속 부추기려 한다.

우리는 박근혜의 반동 본색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 쌓이는 모순과 위기를 봐야 한다.

변혁 좌파들은 박근혜의 위기와 모순을 폭로하며 노동운동의 사기를 높이려고 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공동투쟁과 성과를 쌓아가면서 돌파구를 마련해 다가올 더 큰 기회를 대비해야 한다.

김문성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를 더 위기로 몰아 넣을 자들의 만남을 반대한다

이현주

5월 7일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를 만난다. 당선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고, 핵심 의제는 최근의 한반도 위기 문제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기를 해소할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하는 건 무망하다.

이들은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 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 첨단 핵무기들을 동원해, 언제든 북한을 핵폭탄으로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한국 정부와 우익들도 ‘선제 공격’ 운운하며 온갖 호전적 조치들로 미국의 대북 압박을 측면 지원했다. 정부는 8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미국의 F-35 전투기 60대를 구입할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제는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압박을 실컷 하다가 그나마 한미 정부가 북한에 한 ‘대화’ 제의 자체도 위선적이다. 한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준수 등에 동의해야’ 한다며 북한이 받아들일 리 없는 조건을 걸고 ‘대화’ 하라고 한다. 이달 말까지 한미 연합훈련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것은 목에 칼을 대고 대화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박근혜와 오바마는 ‘평화’는커녕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더 고조할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큰 그림의 일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견제 체제에 더 깊숙이 편입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부담 증액이나 최첨단 무기 구입 등도 요구할 것이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점차 국방비를 감축

해야 할 처지에 있는 미국한테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과 무기 구입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한미는 이미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차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 당사자인 전 한미연합사령관 버웰 벨이 환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작권 환수가 예정대로 이뤄지든, 연기되든 이 지역 문제에 더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미국의 뜻은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한미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도 합의했다. 이것은 ‘국지 도발’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3월 2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단합된 동맹 전선

을 유지하려고 한국, 일본의 관계 회복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일 간 군사 협력은 미국의 동아시아 MD 체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한국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동참하거나 쇄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오바마가 요구하고 박근혜가 호응할 이 모든 조치들은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정에 빠뜨릴 것이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한층 한국을 이 지역의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 이런 모든 논의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무기와 전쟁에 쓸 돈을 복지 확대에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TPP에는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칠레 등이 참가 중이고 얼마 전 일본도 참가를 확정했다.

풀라주 95

풀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노동계급 레알 사전: 메이테이란?

노동자에게 메이테이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날
박근혜에게 메이테이란? 움직이는 날
자본가에게 메이테이란? 1년중 가장 없애고 싶은 날
조중동에게 메이테이란? 5월 1일
경찰관계자에게 메이테이란? 모인 사람 세놓고는 반으로 똑 잘라 말하는 날
자. 그럼~
멋진 연인의 메이테이 멘트란? “자기 오늘 마스크 챙겼어?”
멋진 선배의 메이테이 멘트란? “5월 1일 벌일 없지?”
멋진 후배의 메이테이 멘트란? “친구 데리고와도 되요?”



illusion

한미동맹 강화하며 중국을 힐끔거리는 박근혜

최근 박근혜는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기존 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 테러 대응, 원자력 안전” 등 비정치적 주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신뢰로 나아”가자며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것은 중·미 사이에 긴 한국 지배자들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한국 지배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중국을 최대 무역 상대국

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뻣속까지 친미’라는 새누리당조차 올해 초 새로운 강장·정책에 “평화 지향적인 균형 외교”를 넣기도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중심축은 한미동맹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는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포괄적 전략 동맹” 개념은 2009년 이명박과 오바마가 정상회담에서 처음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 간의 정치·군사·경

제적 협력을 강화해 ‘중국 위협’에 대응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명박은 이에 따라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했고, 미국의 요구라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강행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중국을 모른 척 할 수는 없기에 ‘다자 간 대화’ 운운하는 것이다.

중·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갈피를 잘 못잡는 남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갈수록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전교조 흔들기와 박근혜 특권교육에 맞서

6월 1일 교사대회로 모아자!

김연오 전교조 전국 대의원

박근혜 정부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월 11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전교조가 먼저 현행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해야 교원노조법 개정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동시에 정부는 특권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제중을 늘리고, 이명박 정부가 포기했던 영어몰입교육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폭력 전수 조사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해서 박근혜가 하려는 것은 특권교육 확대, 공교육 후퇴인 것이다.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면 학교와 교사를 구조조정하려는 이런 시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교원노조법

전교조 지도부는 전교조를 공격하는 주된 법적 근거인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호소했고, 1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래서 6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도록 노력하고, 6월 1일 서울에서 대규모 교사대회로 힘을 결집하려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6월 1일 교사대회가 큰 규모로 열릴 수 있게 모든 활동가들이 노력과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날 집회는 정부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맞서는 것과



경쟁교육·특권교육에 맞서 투쟁하는 교사 노동자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결집돼야만 정부의 탄압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2012년 11월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함께 박근혜 정부의 6월 중고등학교 일제교사강행, 중학교 교원 임금과 성과급 후퇴, 특권교육 확대 등에 대한 교사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 주는 자리다.

그러려면 교원노조법 개정 서명운동을 현장에서 조합원을 넘어 비조합원까지 폭넓게 벌이고, 조합원들에게 6월 1일 집회로 결집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동시에 법 개정 요구의 부족한 점도 보

야 한다. 법 개정의 내용은 조합원의 자격을 교원자격증이 있는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는 지금보다 개선되는 것이지만 현재 투쟁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같은 일부 비정규직 교사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

또 지금 교원노조법은 단결권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단체행동권은 불허하

고 있다.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법을 폐기하는 게 맞다.

또한 법 개정 요구가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거부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 개정 서명과 더불어 ‘규약시정명령에 거부하는 교사 선언’ 역시 필요하다. ‘규약시정명령에 거부하는 교사 선언’은 해고자의 조합원 신분 유지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

기 위한 것이다.

해고 조합원 문제에 대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결집돼야만 이후 법외노조화 시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법외노조화 시도를 분쇄하고, 특권중만을 위한 ‘꿈과 끼’를 살리려는 교육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6월 1일 교사대회를 대규모로 건설하자!

운동 속의 논쟁

교육 문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최근에 전교조 신입 지도부의 발의로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이 결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결성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연대체의 필요성을 꼽았다.

사실, 그동안 전교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파가 바뀌면 그에 따라 교육 연대체가 해소·신설되는 과정이 반복되곤 했다.

‘교육단체연대회의(준)’ 이전에는 ‘행복 세상을여는교육연대’(‘행복교육연대’)가 있었다. 이 ‘행복교육연대’는 ‘WTO 교육 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범국민교육연대’)를 해소하고 결성한 교육 연대체였다.

전교조 지도부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 연대체 참가 단체들에 해소·신설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 당연히 기존 교육 연대체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아쉽게도,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결성 과정도 이런 구태를 벗지 못했다.

이것은 진지하게 교육 운동의 연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대를 위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교육 운동 단체들 사이에서 ‘교육 연대체가 전교조 지도부의 부속물인가’ 하는 정당한 항변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신입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에서 정치 단체의 참가를 배제했다. 이 점이 새 교육 연대체의 중요한 특징이다.

여기에는 교육 연대체는 교육 문제를 다루는 기구이므로 교육 단체들만 참가해야지, 정치 단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 단체로만 교육 연대체를 구성한다는 부문주의적 관점은 국가 정책에 맞선 저항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교육 문제는 결코 교육 부문(또는 단체)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정치 문제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

무엇보다 국가가 강력하게 교육을 통제하고 있다. 국가는 교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 공무원, 학생 들을 옥죄는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전교조가 직면한 최대 문제 중 하나도 국가에 의한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다.

2009년 전교조 초동위원회가 실시한 ‘교사 스트레스에 대한 실태와 교사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봐도, 교사들의 최대 스트레스는 “잘못된 교육 정책”이었다.

그래서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리는 현실에서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 교육 정책의 근본이 계급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반

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조차 교육의 중립성 논리는 그다지 쓸모 있는 무기가 못 된다. 오히려 교육의 중립성 논리는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족쇄 구실을 해 왔다.

한편, 교육 단체로만 교육 연대체를 구성한다는 정치 배제 입장은 오늘날 유행하는 자율주의 사상을 연상케 한다. 자율주의 사상은 운동이 모든 종류의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거나 정당이 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전교조 지도부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정당들과 협력하는 등 정당의 구실을 일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발성 옹호론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의 문제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기를 회피하며 정치가 운동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로 흔히 그런 회피를 합리화하는 듯하다.

오늘날 국제 운동들에서도 좌파 개혁주의가 (연성) 자율주의와 결합돼 급진적 개

혁주의로 나타나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 지도부가 중요하게 제기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도 국가와 대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요컨대, 교육 문제는 정치를 피해 갈 수가 없다.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테다. 교육 운동은 더욱 정치적으로 돼야 한다.

김인식



상봉동의 어느 공사장에서 / 사진·글 이윤선



99퍼센트의 눈

말이 없는 김 씨

김 씨가 공사판이 좋아서 온 것은 아니었다. 가족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기에 남은 몸뚱이를 일용직으로 공사장에 팔아야만 했다.

김 씨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안전시설 없는 난간을 지나가며 여러 생각이 스친다. 지난주 이 난간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도 변변한 보상을 못 받은 박 씨 이야기는, 적어도 오늘은 내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안전시설을 요구해 봤지만, 예산이 없으니 따지지 말고 건널 때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다그치는 감독의 말이 맞는 듯하다.

주인인 건설 자본을 닳아 일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과 땀을 먹고 자라는 건물은 곳곳에서 자라난다.

천대와 열시를 딛고 일어난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밋빛 약속과 달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기만과 모순으로 가득하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턱없이 적는데다 무기계약직조차 해고 위협과 임금 차별을 당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을 덜기 위해 상시·지속 업무 범위를 좁게 잡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 7천7백20명 중 무기계약 전환 대상을 단 36명으로 집계했다!

무기계약직의 처우도 정규직과는 거리가 멀다. 2백50여 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의 조직인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은 절대로 정규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다 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괴짜적인 현실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 호봉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학교비정규직, 인천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퍼센트가 넘는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주목할 만하다.

온갖 궂은 일들을 묵묵히 하면서도 차별과 열시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에만 5만 명이 노조로 조직됐는데 이는 두 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지난해 파업은 이들이 단지 약자가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스스로 만들어온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교육공무직 전환, 교육감 직접고용 요구는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대변한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과 투쟁에 떠밀려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과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한사코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전환은 반대하고 있다.

선불리 양보를 했다가 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자극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케이بل 비정규직 등 곳곳에서 새로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리는 상황에서 우려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진이 중요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는 6월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구유성회직을 향한 공격에 맞선 투쟁과 교육감 직접고용, 임단협 체결을 위한 투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잠정 체결하고 서울에서도 교육감 직접고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처럼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단결해 싸워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연대도 중요하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요구가 기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간질하려 한다. 따라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학교비정규직 투쟁을 흠뻑 지지하면서 실질적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서울시교육청의 노조 위원장을 앞세워 학교비정규직을 공격할 때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학교비정규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찬사가 쏟아진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 투쟁의 전진을 위해 다 함께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

조명지



전민희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라”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의 공동 파업 투쟁은 희망을 보여 줬다. 2012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정규직화하라

공채 1기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고용계약 기간이 올해 8월로 만료돼, 7백여 명이 대거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영전강은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초·중등학교 영어교육의 상당 부분을 메워 왔다. 이들도 엄연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지만,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냉대를 받아 왔다.

정규직 교사들이 받는 성과급, 명절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을 못 받았고, 방과 후 수업과 방학 중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다. 극심한 고용불안 때문에 학교 관리자들의 강한 통제를 받으며 이런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 왔다.

터무니없게도 교육부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영전강들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교육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공

교육 강화’와 더 좋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따라서 영전강은 마땅히 정규직화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영전강을 즉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을 방어해야

지난해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를 둘러싸고 주요 당사자 단체인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전교조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불거졌고,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전교조의 대책 없는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폐지 주장”을 비판하며 반발했다.

이런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지난해 전교조 지도부는 해고 위협에 놓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고용안정 대책은 회피한 채 제도 폐지만 요구했다. 이는 영전강의 해고를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전교조 신임 지도부가 영전강의 고용안정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영어교육의 제도적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마련되기 전이라도, 전교조가 당장 해고 위협에 놓인 비정규 교사들을 방어해야 한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늘리는 데 이용된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에 대한 전교조 지도부의 문제의식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영전강은 이런 제도적 문제에 아무 책임이 없다. 따라서 현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영전강의 고용안정 투쟁 지지와 대립할 이유는 없다.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임용교사 통과자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고, 영전강 해고에 침묵해서도 안 된다. 교사로서 전문성은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의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교사양성체계를 절대시하는 관점은 협력, 전인교육, 평등 축진을 중시하는 진보교육의 논리에 어긋난다.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사 간 협력을 증대하는 방식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인턴교사 같은 비정규직 교사를 크게 늘려 왔다. 이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교사들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원과 비교원 등의 조건을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

영전강은 정규직 교사의 경쟁 대상이 아니라 연대 대상이다. 정규직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정부가 교육재정을 확충해 정규직 교원을 대거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진희

무급휴직자 복귀 후에도 계속되는 쌍용차 고용불안과 먹튀 우려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3월 5일 복귀한 쌍용차 무급휴직자(와 징계 해고자·정직자)들이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5월 13일경으로 예고된 업무 배치에서 3명 중 1명이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복귀한 무급휴직자, 징계 해고자, 정직자 4백89명 중 3백36명만 작업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백53명은 또다시(유급)휴직자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년 가까이 고통을 견뎌 온 노동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마힌드라가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직접 투자조차 하지 않겠다고 못

을 박으면서 이런 상황은 예고됐다.

마힌드라는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사회적 압력에 밀려 “1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가, 한 달 만에 말을 바꿔(유상증자) 8백억 원 이상은 투자 못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마힌드라는 최근 쌍용차 기술력을 이용해 인도에서 출시할 자동차의 신형 엔진 개발에는 무려 8천8백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마힌드라의 진정한 관심사는 쌍용차 ‘기술 유출’과 먹튀에 있다.

쌍용차 사측이 최근 복귀한 무급휴직자들에게 체불임금 청구소송 취하를 협박하고, 2009년 파업 참가자들을 향해 또다시

‘징계’의 칼을 빼든 것도 이와 관련 있다.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면서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에 노동자들을 등쳐 먹고 달아난 상하이차가 갔던 길을 고스란히 뒤 따르고 있는 것이다.

목숨줄

이 상황에서 해고자들은 계속되는 경찰과의 충돌과 연행, 구속영장 청구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문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이런 끈질긴 투쟁이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고 무급휴직자들을 복귀시킨 밑거름이었다. 그런데 복귀한 동료들이 또다시

겪는 고용불안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고용 보장 의지도 능력도 없는 마힌드라에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맡길 수는 없다.

쌍용차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정부가 쌍용차를 공기업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상하이차와 마힌드라에 쌍용차를 팔아넘긴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2009년 대량해고는 사실상 정부 소유의 법정관리하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 요구는 먼 미래에나 실현 가능한 추상적 선언이 아니다. 마힌드라의 먹튀 이후에

나 제기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는 지금 공장 밖에서 싸우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고 고통불안에 시달리는 모든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한 요구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1998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 부도와 매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뼈에 사무치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또다시 ‘먹튀’와 대량해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쌍용차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다.

박설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 Q&A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호전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최근에는 8년 만에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되는 등 여전히 한반도 평화는 안갯속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제기되는 물음들에 답한다.

01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남한으로 표기)의 지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이 협박과 도발을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국가다. 남한도 해마다 북한 GDP보다 더 많은 돈을 군비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2002년에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사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도 이때부터다.

최근 긴장 국면도 그 출발점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빌미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북한 공격과 점령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은 어느 해보다도 강도 높게 진행됐다. 미국과 남한의 군대는 핵폭격기와 핵잠수함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공격권에 둔 핵 공격 연습까지 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북한에 큰 압력이 됐고 호전적인 맞대응을 불러왔다. 따라서 지금 한반도 위기의 주된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02 왜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세계 산업생산의 50퍼센트를 차지했지만, 1980년대에 그 비율은 25퍼센트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8~10퍼센트씩 성장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급격히 군사력을 증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제국주의 서열 꼭대기 자리를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재균형)’ 전략의 배경이다.

여기서 북한의 존재는 좋은 명분이 됐다. 즉, 미국은 북한 핵무기라는 ‘악마’를 힘으로 다스림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자신의 패권을 각인하고,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남한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도 단단히 묶어 둘 수 있었다.

미국은 ‘북한 위협’을 이용해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일본을 손쉽게 끌어들이 수 있었다. 또, 미국은 2010년 연평도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를 서해로 보냈다.

최근 오바마가 동아시아에 주한·주일 미군 수를 크게 늘리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부다.

이번 한반도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수혜자도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동아시아 MD 구축을 한 단계 전진시켰다. F-35 같은 최신 무기도 남한이 구매케 하려 한다.

미국 서부 해안에 요격 미사일을 50퍼센트 증강 배치하기로 했고,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도 예상보다 빨리 괌에 배치할 수 있었다.

03 박근혜 정부는 그 나름으로 적절하게 위기에 대처했는가?

이번에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가 드러났다. 박근혜가 고른 외교·안보 인사만 봐도 김장수, 남재준, 김관진 등 군부 출신의 대북 강경파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또,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전에서 ‘쏘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 조치 후 보고하라’는 것이다. 박근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



대북 공격 훈련 중인 남한 군대. 남한은 해마다 북한 GDP보다 더 많은 돈을 군비에 쏟아붓고 있다.

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서해 등지에서 우발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사실상 이명박과 별로 다르지 않다. 강경하고 호전적인 대북 정책을 유지하며 한반도 위기의 요인인 한미동맹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주당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하며 박근혜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04 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가?

분명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장도 지지할 수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남한 노동자·민중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민중의 삶도 희생시킨다. 가용 자원을 군사 분야로 최대한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 제국주의가 동북아 개입을 정당화하고 일본이 재무장하는 데 빌미로 이용돼 왔다.

이는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준다. 북한 정권의 목표는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체제 보장’을 받고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다. 그래서 북한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한다.

05 한반도 전쟁 위기는 실질적인가?

〈레프트21〉이 그동안 지적했듯이, 당장 북한과 미국·남한 간에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북한 ‘악마화’의 배경인 중·미 갈등도 단기간에 정면 충돌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처럼 우리의 제국주의 분석을 미·중 간 세계대전 일보직전이라는 식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테러와의 전쟁’ 실패와 경제 위기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당장 또 다른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다.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로 군비도 줄여야 하는 처지다.

또한 중국도 아직 미국의 패권에 정면 도전할 처지가 아니다. 중국이 급속히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군비를 엄청 늘렸지만, ‘G2’라고 보는 건 과장이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많이 뒤쳐져 있다.

따라서 미국은 당장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벌이려는 게 아니다. 대신에 북한을 핑계 삼아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미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만 보는 일부의 시각도 일면적이다. 동아시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데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제 위

기는 강대국들 사이에 경쟁과 긴장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동아시아는 불안정이 점차 증대해 왔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격화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에서도 국지적 충돌의 횡수와 강도가 높아졌다.

중·미 갈등 속에 동아시아는 치열한 군비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남한 등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군비를 꺾절 이상 늘렸다.

따라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우리는 단기간에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국지적 충돌 가능성은 존재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06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운동의 요구 조건으로 내놓아야 하는가?

진보운동 일각에서는 평화운동이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 조건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위험천만한 핵과 핵무기에 대한 반감은 이해할 만하다. 북한 핵무장에 대한 비판도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무장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운동의 요구로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폐기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전문용어이다. 이 요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한반도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흐려 효과적으로 운동을 건설할 수 없게 만든다.

현재의 구체적 상황에서 미국 지배자들과 남한 정권은 모두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 군사동맹 강화가 긴장 고조의 주된 원인이다.



사진 출처 박근혜 블리거



사진 이원호

(위) 한반도 긴장을 부채질하는 박근혜 박근혜는 호전적 대북정책을 유지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아래) 텅 빈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경 게이트 고조되는 남북 긴장 속에 개성공단도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1만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고, 며칠 전에도 온갖 최신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온 미국이 말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요구는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맥락에서는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남한 정권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요구는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되풀이되는 미국의 합의 폐기와 악의적 무시 속에서 핵 개발에 매달려 온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한 운동은 결국 마비될 것이다.

또, 이 요구는 운동을 분열시킨다. 북한 핵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때문에 운동은 힘을 모아서 전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운동은 지난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의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국제 반전 운동은 ‘테러 반대, 전쟁 반대’라는 식의 양비론에 빠지지 않고, 사태의 핵심인 (테러를 빌미로 한) 미국의 전쟁 물의를 정확히 간파해 강력한 반전 운동을 건설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진보운동은 정권의 차이를 넘어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패권 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07 평화 협정이 해결책이 될까?

진보진영에서 나오는 제안들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6자 회담 재개’, ‘평화 협정 체결’ 등 국가 간 대화와 합의를 촉구하는 게 많다.

물론 대결과 긴장보다 대화와 평화를 바라는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양자 회담이나 다자 회담을 통해 모종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불안정한 평화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합의를 번번이 깨뜨려 왔다.

그래서 고(故) 리영희 선생은 2005년 9·19 합의 직후 “미국이 조약을 단 한 번도 지킨 사례가 없으므로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문제에

푸에블로 호 사건

1968년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 호가 북한에 나포된 사건. 미국은 초반에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항공모함을 동해로 급파했고, 박정희도 즉각적인 대북한 전쟁을 원했지만, 베트남 수렁에 빠진 미국은 전선을 확대할 수 없었다. 결국 미국은 북한 영해 침입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다.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단서를 잡아야 한다. … 종이 조각을 토대로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한 바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 간 합의는 안정적인 평화는커녕,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숏하게 많다.

예컨대 1972년 말 미국 대통령 닉슨은 북베트남과의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12월 하순 동안 베트남전 기간 중 최대 규모의 폭격으로 수많은 베트남인들을 학살했다. 협정은 한달 뒤인 이듬해 1월 23일에 체결됐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2년 뒤인 1975년 4월이었다.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오슬로 평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저항을 가로막는 구실만 했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과 학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 간 외교와 이를 통한 민족화해를 가장 중시하는 관점으로는 반전평화 운동을 아래로부터 강력하게 건설하기 어렵다. 예컨대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추구한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진영은 지배계급에 외교적 조언이나 도움을 주려 할 게 아니라 독립적인 대중 운동을 건설하려 해야 한다.

08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과 대북 압박이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증대시

키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즉, 한반도 불안의 진정한 원인은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자들의 친제국주의 정책이 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현 사태를 분석하고,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을 악화할 대북 제재와 대규모 한미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일군사협정, 미사일방어체계(MD) 참가 등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강화할 조치들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 수입과 군비 증강,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막아서며 그 돈을 복지 확대에 돌리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와 평화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착실하게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는 아래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닥쳤을 때 여러 차례 한계를 보여줬다.

한반도에서도 이런 저항 등으로 미국 제국주의의 기가 꺾였을 때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나타나곤 했다. 예컨대 1968년 푸에블로 호 사건”으로 터진 위기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진 데 있었다.

2005년에 부시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의 제국주의 간 긴장과 갈등은 심각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위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긴축과 사영화,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들에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서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저항이 노동계급이 단결해 싸우는 계급투쟁으로 발전하는 전략적 방향 속에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이 장차 반제국주의 투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영익·성지현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앞세우는 일본 해상자위대.

침략 역사를 되풀이할 기세인 아베 정권

일본 총리 아베는 당선 직후 “일본의 귀환”을 선언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으면 최근 그가 내뱉은 일련의 극우 망언을 보면 된다.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활동이 상당히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골수 우익답게, 아베는 일본 국회의원과 각료 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부추겼고, 급기야 “침략이라는 정의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했다. 현직 총리가 이처럼 질 나쁜 포스트모더니즘적 농담을 국회 공식 석상에서 한 사례는 전에는 없었다.

이미 아베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일부 사죄한 ‘무라야마 선언’과 위안부 강제 연행을 시인한 ‘고노 담화’마저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본 우익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는 사악한 목적이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이다.

심지어 아베는 우익 민간단체가 하던 4월 28일 ‘주권 회복의 날(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기념일)’ 행사를 국가 공식 행사로 승격하고, 여기에 ‘천황’을 초대하겠다고 버린다.

이런 일련의 망언과 극우 프로젝트는 평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있다. 아베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96조 개정을 쟁점화하려 한다. 헌법 96조에 규정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완화(중·참의원 3분

의 2 찬성을 과반 찬성으로)해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 개정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아베는 북핵 문제와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분쟁 등으로 고조된 긴장 국면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듯하다.

아베의 망언 패레이드와 다오위다오에 대한 초강경 발언은 일본 극우 단체들을 고무했다. 심지어 그들은 사실상 일본 해양순시선의 엄호를 받으며 다오위다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망언

물론, 아베의 강경 드라이브는 미국과 일부 일본 지배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노력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위선적이거나 양면적이다. 그동안 미국은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위해 일본의 군비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을 압박하고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역시 위선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는 “과거 상처를 벗어나게 하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그 “미래지향적 관계”란 무엇일까? 미국의 주도 아래 한미일이 더 긴밀하게 군사적·신자유주의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이 뜻

하는 바는 분명하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을 주체는 미국도 한국의 지배계급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규한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꺼지지 않은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만료 시한을 2년 연장기로 합의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한국과 ‘그건 곤란하다’는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팽팽했던 듯하다.

정몽준을 필두로 한 우익과 보수언론 들은 ‘일본은 허락했으면서 왜 우린 안 되냐’고 울분을 토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여지를 남겨 줬다. 미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요구할 게(방위비 부담 증액, 무기 구매 등) 많은 처지인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핵 확산 억제’ 등을 운

운하지만, 미국이 핵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은 무기와 핵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고 싶을 뿐이다.

이번에 미국이 전략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근처로 총출동시킨 것도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 미국의 핵무기를 믿으라는 신호였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일본이나 인도에 그랬듯이 한국의 핵 재처리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남한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과, 핵 패권을 위해 이 지역을 위협에 빠뜨려 온 미국의 위선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이현주



사진:이영선

다시 꿈틀거리는 현대차 노동자들 8주간의 정규직 특근 거부 투쟁에 힘입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몸을 풀기 시작했다. 4월 26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

현대·기아차 주말 특근 거부 투쟁이 보여 준 것

심야노동은 폐지됐지만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4월 26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대의원대표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특근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3월부터 강해진 노동강도가 주말 특근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게다가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주 특근을 해야 해서 주 6일 노동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현대차 사측은 이 합의에 대해 '주말에도 평일처럼 2개조를 운영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문용문 지부장의 이번 합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반발은 정당하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그동안 8주째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주말 특근 거부 투쟁으로 생산 차질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몽구가 직접 나서 국내 생산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악발이 먹히지 않

았는데, 자동차 생산은 쉽사리 생산 물량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량 이전을 위해서는 라인 재조정 등 쉽지 않은 작업이 필요하다.”(산업연구원 이항구) 게다가 현대·기아차는 몇 년째 순이익 기록을 경신해 왔다.

특근 거부 투쟁은 주간연속2교대 투쟁의 연장선에 있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투쟁해 심야노동은 폐지했지만, 미완의 정점이 많이 남아 있다. 지난해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52.7퍼센트가 찬성해 가까스로 반수를 넘었다.

이런 불만과, “3년 무쟁의”를 뚫고 벌인 지난해 투쟁에서 얻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주말 특근 거부 투쟁의 밑바탕에 있었다.

주간연속2교대 도입의 핵심은 심야노동 폐지와 노동시간 단축이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자본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공장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돌려 이윤을 뽑아내려는 자본가들과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였다.

2천5백 시간

심야노동은 폐지됐지만, “현대차에 기술직(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2천5백 시간에 육박한다”(박태주,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의 합의 내용과 평가”)는 지적도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1천7백64시간인데, 한국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2천2백32시간이다(2010년 기준). 주간연속2교대가 도입됐어도 현대차 노동자들은 OECD에서 가장 긴 한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따라서 주말 특근 거부 투쟁에는 주

6일 근무 고착화라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반감이 반영돼 있었다. 게다가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주간연속2교대 도입으로 노동강도가 강해졌는데 이것이 주말 특근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주말 특근을 통해 사측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는 높이며, 생산량은 유지하려 한다.

지난해까지 현대차 사측이 공간에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무려 33조 원이다. 왜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는가.

주말 특근을 폐지해야 온전한 주5일 근무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근이 폐지되더라도 임금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 바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일환이고, 이는 특근 거부 투쟁이 보여 준 힘을 제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강화해서 나아가야 할 과

제다.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확충해야 하고,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사내하청과 촉탁 계약직)들을 채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것이다.

최근 특근 거부 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투사들은 이번 합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럴 때 투쟁은 서로 힘을 받으며, 현대차 사측에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을 것이다.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다시 투쟁에 나서는 현대차비정규직

소강상태던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재개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4월 말에서 5월까지 투쟁 계획을 세웠다.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4월 26일 비정규직 3지회는 조합원이 모두 대규모로 서울로 집결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해고된 현대차 촉탁 계약직 청년 노동자의 자살,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노동자의 분신은 현대·기아차 사측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차별에 맞선 투쟁이다. 박근혜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내하도급법(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악법) 도입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 현대차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현대차는 촉탁 계약직 해고를 중단하라

현대차 사측은 지난해 7월 비정규직 노동자 1천5백여 명을 촉탁 계약직(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불법 파견 판정 작업장에서 하루라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흡수를 부린 것이다. 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 길어야 6개월이다. 심지어 2주나, 3주짜리 초단기 계약도 등장했다. 촉탁 계약직 청

년의 자살을 접한 어느 촉탁 계약직 노동자의 말이다.

“죽음 소식을 접하고 답답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5월에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저처럼 계약서를 쓴 사람들 중 얼마가 해고되고 또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아 끝났구나’ 하는 거죠.”

당혹스럽게도 현대차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20일에 현대차 사측과 촉탁 계약직 사용을 합의했다. 지도부가 이 합의 사실을 대의원대회에서 보고 안전으로 처리하려 했을 때 전투적 대의원들이 합의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촉탁 계약직 사용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 유연화를 강화하는 촉탁 계약직 확대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 벌어지는 촉탁 계약직 해고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현대차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촉탁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기선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기아차 광주 공장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4월 16일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이 분신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올해 증산 계획이 있어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 기아차광주지회 지도부는 장기근속자 자녀와 비정규직 우선 채용을 요구했다.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분회는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기아차 사측과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신규채용시 장기근속자 자녀에

게 가산점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런 요구와 합의는 부적절하다.

이것이 기아차의 관행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항변은 자기 공장 내부만 보는 협소한 시각의 소산이다. 자동차 정규직 일자리가 상대적 고임금이 되고,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합의는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 시도에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역겹게도 “기아차 ‘일자리 대물림’ 청년 세대 저항 부를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방씨 일가 ‘대물림’ 신문 주제에 말이다.

기아차지부와 기아차 사측의 가산점 부여 합의는 정규직화를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을 것이다. 심정은 공감하지만, 광주 사내하청분회가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아쉽기는 하다.

광주지회 지도부는 분신 직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선포했고, 사측은 압력에 밀려 특별교섭을 시작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이 성공을 거두려면, 원·하청연대가 사활적이다. 그러려면 기아차지부 지도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 할 수 있는 장기근속자 가산점 부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옳다.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친시장 경제학의 긴축 정당화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한 주류 경제학자들이 긴축을 정당화하며 쓴 연구 논문의 오류가 최근 밝혀졌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긴축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설명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

이번 경제 위기는 여러모로 불가사의한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경제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이 2007~08년의 금융 공황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영국 여왕조차 아는 사실인데도 말이다. 그들이 예견 못 할 만도 한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고안해 낸 수학 모형들을 보면, 그런 공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다뤄진다.

그럼에도 모형 만들기 놀이는 계속 된다. 이번에는 긴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출신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의 공로가 컸다.

2010년 이 둘은 이후 긴축론자들이 단골 매뉴처럼 인용하는 논문 한 편을 발표했다. 그들은 2012년에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금융 위기의 역사, 성장과 공공 부채 사이의 관계를 다룬 우리의 실증 연구는 현재의 부채 증가세가 장기적 성장과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많은 선진국들의 국가 부채 비율이 이미 GDP 대비 90퍼센트라는 중요한 임계점을 향하거나 넘어섰다.”

로고프는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논설위원인 마틴 울프에게서 존경 어린 인터뷰를 받기도 했다. 그 인터뷰 기사에서 마틴 울프는 로고프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인물이며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나라 빛이 많은 정부들이 재정적자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로고프의 조언은 지출 삭감을 우선순위에 놓기로 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던 로고프와



사진 출처: Andreas Kontos (블리카)

경제 위기와 긴축이 낳은 참상 ‘저명하다’는 학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정당화한 논리는 엉터리였다.

라인하트의 연구 결과는 지난주 미국 메사추세츠 엠허스트 대학의 경제학자 세 명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졌다(참고로 이 대학에는 영어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중도좌파 성향의 경제학과가 있다).

허위

로고프와 라인하트의 연구는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근거로 국가 부채가 GDP의 90퍼센트를 넘으면 경제성장이 급감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메사추세츠대학 연구진은 로고프와 라인하트가 엑셀 프로그램을 쓰면서 오류를 저질러 5개국 통계를 계산에서

빠트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로고프와 라인하트는 부채와 성장률이 모두 높은 나라들도 분석에서 제외했고, 개별 나라들의 국가 부채가 GDP의 90퍼센트를 웃돈 시기가 얼마나 길었는지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실수들을 모두 고쳐 놓고 보니 부채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인 나라들의 평균 성장률은 로고프와 라인하트가 계산한 마이너스 0.1퍼센트가 아니라 플러스 2.2퍼센트였다.

로고프와 라인하트는 이런 치명적 비판에 재빨리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연구 결과 중 나머지 부분에는 그런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긴축 정책에 힘

티파티

작은 정부와 세금 인하를 주장하는 미국의 극우의 운동.



을 실어 주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둘째 주장은 그다지 정직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그들의 논문에는 “과도한 부채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부채가 달려 있다. 티파티의 이데올로기이자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서 공공 지출 삭감 필요성을 강조한 폴 라이언도 바로 그 논문을 “확실한 경험적 증거”로 내세웠다.

설령 로고프와 라인하트의 계산에

오류가 없었다 한들 그것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증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높은 부채율과 낮은 경제성장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과학의 기본이다. 예컨대, 비가 내리는 것과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서 비가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비가 내려서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인지 말해 주지 않는다.

로고프와 라인하트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부채 비율이 높아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낮아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주에 영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강등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즉, 경기 수축 탓에 영국 정부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더 힘들다는 것이다. 경기가 나쁠수록 정부는 실업 급여 등을 지급하려면 돈을 더 많이 빌려야 하고, 국민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그만큼 커진다.

미국과 영국 모두 제2차세계대전 직후 부채 비율이 90퍼센트를 넘었지만 고속 성장 덕분에 부채를 털어냈다. 이 점은 서방 자본주의가 오늘날 직면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암시해 준다. 이윤율이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는 높았지만 지금은 훨씬 낮아진 것이 진정한 문제다. 그러나 로고프와 라인하트 같은 부류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를 무리일 것이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50호 / 번역 천경록

반핵 운동 활동가 헬렌 칼디콧

“재앙을 피하려면 핵발전소를 모조리 폐쇄해야 합니다”

세계적 반핵 운동 활동가로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올랐고 국내에 출간된 <원자력은 아니다>(양문, 2007)의 저자인 헬렌 칼디콧이 지난 4월 한국을 찾아 방사능과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위험을 고발하는 연설을 했다.

소아과 의사기도 한 칼디콧은 ‘핵 물질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통렬히 반박했다.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도 위험합니다. 정부는 특하면 ‘자연 상태에서 노출된 방사선 수준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방사선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쬔면 그만큼 암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 때문에 치과용 엑스레이를 맞는 사람은 뇌종양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이 방사능 안전기준(1백 벵크렐)을 충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방사능은 아무리 적어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습 원자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 세포 하나만 파괴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음식 속 방사능 수치가 97벵크렐이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음식을 여러 개 매일 먹으면 몸 안에서 농축됩니다.”

칼디콧은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당시 노심용융이 3곳에서



자료 출처: AP

헬렌 칼디콧

일어났다는 사실을 세 달 동안 숨겼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거짓말한다고 폭로했다.

“후쿠시마에서 자란 농산물은 대부분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대표적인 쌀 재배지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쌀을 다른 지역 쌀과 섞어 ‘희석한’ 뒤 방사능 위험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농부를 위한답시고 쌀을 계속 재배하라고 독려하고, 그 쌀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이미 후쿠시마 어린이 10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칼디콧은 한국에 핵발전소가 23기나 있고 정부는 6기를 더 짓고 있다며, 이것이 한

반도의 진정한 핵위험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쏠 필요도 없습니다. 재래식 미사일 한 기로 (남한의) 핵발전소를 맞추면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박근혜와 미국은 휴전선 코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합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투기를 동원해서 말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방부는 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있는 핵발전소를 한 기도 남김없이 모두 폐쇄하고 북한과 우애롭게 지내야 합니다.”

위선

또, 미국의 위선을 폭로하며 평화를 촉구했다.

“지구 상 2만 개에 이르는 수소폭탄 중 97퍼센트를 러시아와 미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어머니 세상에, 북한은 핵폭탄을 무려 3개나 갖고 있어!’ 하며 호들갑을 떨니다. 너무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오바마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발사할 수 있는 수소폭탄 1천 기가 발사대기 중이고 30분 만에 러시아에 떨어집니다. 러시아 역시 30분 안에 미국에 닿는 수소폭탄 1천 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10기는 서울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칼디콧은 아인슈타인의 경고로 강연

을 마무리했다.

“원자를 쪼개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 자체가 바뀌었고, 지구의 종말이라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재난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종환

핵폐기물 재처리 “지옥에서 온 기술”

“박근혜 정부는 핵폐기장이 부족하며 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칼디콧이 이것의 문제를 지적한다.

“먼저 재처리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로 한 기에서 해마다 폐기물 30톤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플루토늄을 얻습니다. 이 기술로 미국은 수년 동안 핵폭탄 7만 7천 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미국은 정말 미치광이입니다.

“플루토늄은 25만 년간 격리해야 합니다. [재처리 기술은] 우라늄 대신 플루토늄이 가득 든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쓰는 물질은 공기와 만나면 폭발하기 때문에 냉각 파이프에 금만 가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 5킬로그램만 있으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루토늄 1백 톤이 모여 있는 [재처리 발전소에서] 냉각액이 새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재처리 기술을 통해 플루토늄의 9퍼센트는 다른 방사능 물질로 바뀌고 91퍼센트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게 폐기물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91퍼센트가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또, 플루토늄이 타고 남은 물질들도 방사능을 띕니다. 폐기물을 조금도 줄이지 않고, 더 많은 폐기물을, 더 위험한 형태로 만들어 냅니다. 저는 재처리 기술을 ‘지옥에서 온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터뷰·정리 김종환

촛불항쟁 5주년

새 저항 세대를 낳은 찬란한 정치 투쟁

김지윤

2008년 5월 2일, 취임하자마자 역주행하는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타올랐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제안한 촛불 시위에 약 2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2007년 17대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이명박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대중의 보수화'를 말하며 낙담해 있던 사람들에게 촛불의 분출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

촛불 운동의 등장은 '한국 사회 보수화'론을 반박하는 통쾌한 증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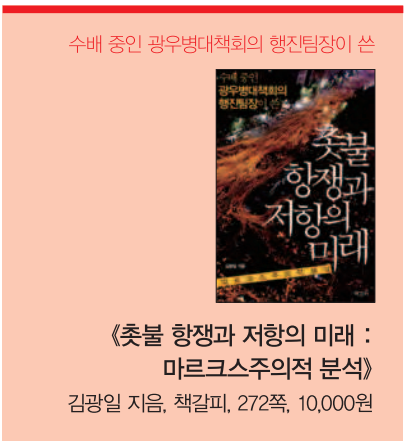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결정은 촛불 시위의 방아쇠 구실을 했을 뿐이었다.

청소년들이 내건 '0교시에 아침 못 먹고 학교 급식에서 미친 소 먹어도 의료 민영화로 치료 못 받고 죽거든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구호는 사람들의 분노가 단지 광우병 문제에 갇혀 있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운하, 의료 민영화, 언론 장악, 경쟁 교육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게다가 첫날부터 "이명박 탄핵", "이명박은 물러가라"가 주요 구호였다.

즉, 촛불항쟁은 정치권력에 맞선 정치 투쟁이었다. 촛불은 청소년에서 출발해 대학생, 청년, 노동자들에게 번져 나갔다. 거리로 나온 많은 청년은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1천 5백 개 단체가 모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구성했다. 대책회의는 운동의 정치적 구심이었다.

우석균, 박상표, 우희종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광우병 과잉'론에 맞서 운동의 정당성을 지키고 참가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200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촛불항쟁 촛불항쟁은 거리 시위를 노동자 투쟁과 만나도록 하는 혁명적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5월 24일 시작한 거리 행진은 운동의 새로운 기점이었다. 대책회의 내 대다수 단체들은 '자발성에 개입할 수 없다'며 대책회의가 거리 행진을 조직하자는 의견에 반대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다함께 등 열의 있는 소속 단체들이 "행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런 주도성 덕분에 대중의 자발성은 청계광장에 갇히지 않고 거리에서 폭발할 수 있었다.

실종된 고리

6월 10일은 이 투쟁의 정점이었다. 서울에서만 70만 명이, 전국에서는 1백만 명이 모였다. 1987년 6월 10일 다음으로 최대 규모 시위였다. 이명박 '불도저'의 엔진을 덜덜거리게 만든 것은 모두 촛불의 힘이었다. 결국 이명박은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들으며 뼈저린 반성을 했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6·10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물음이 던져졌다. 이미 거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의제가 확대됐고,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구호가 압도하고 있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경쟁 교육, 의료 사영화 등 정권의 정책 전반을 반대하는 운동은 정권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렀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40퍼센트가 퇴진을 지지했고 촛불 내에서는 더 높았다.

대책회의는 거리의 열망을 모아 운동의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노동자 파업을 호소해야 했다.

그러나 대책회의 내 다수는 아쉽게도 이런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 대책회의 내 온건한 NGO와 개혁주의 지도자 등은 이 운동을 '제도화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기성 정당과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정권은 반격을 퍼부었다. 이명박은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 시위는 엄격히 대처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다. 폭력 진압과 무더기 연행이 이어졌다. 이명박은 촛불이 계속돼 깊어지는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과 만나게 될까 두려웠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고시 강행 사전면 파업'이라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면 어땠을까? 거리의 촛불 시위와 '국가 골간 산업을 모두 틀어쥔 자력 있는 집단'인 조직노동자들의 파업이 결합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났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거리 시위대에게는 없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윤 체제를 멈출 수 있는 힘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초기부터 '노조 조끼를 벗고 시민으로 참가하겠다'는 태도였고, 상징적 두 시간 파업을 하는 데 그쳤다. 노동자 투쟁은 1백만 촛불이 그토록 바라던 '실종된 고리'였다.

1백 회 넘게 계속됐던 촛불은 결국, 이명박의 집요한 탄압과 김빠기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다.

퇴적물

촛불이 사그라진 후 이명박이 다시 개악을 추진하자 진보진영 내 일부는 '촛불이 성취한 것이 없다'는 식의 패배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은 이명박 정부를 1년 동안 통치 불능의 정치적 식물 정권으로 만들었고 주요 개악들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무엇보다 촛불항쟁이 낳은 최대 성과는 한 세대 전체를 거대하게 급진화시켰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언

제든지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는 잠재적 시위자들이 생겼다"며 두려워했다.

일부에서는 '거리 시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정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그 정치는 촛불의 요구를 대변할 수 없는 민주통합당과의 동맹을 통한 의회 정치로 한정된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촛불항쟁은 거리 시위의 힘을 일관된 방향으로 모으고 이것이 노동자 투쟁과 만나도록 하는 혁명적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2008년 촛불항쟁은 우파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명박의 정책에 온몸으로 저항한 촛불항쟁은 박근혜 시대에 불씨를 남기고 있다.

자생성과 리더십의 상호작용

촛불항쟁에서 나타난 대중의 자생성은 놀라웠다. 촛불 대중은 정부의 '배후 세력론'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촛불을 치켜들었다. 이는 대중 자신이야말로 사회 변화의 진정한 주체임을 확인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반면, 운동 내 리더십은 '낡은 것'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순수한' 자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시위나 파업이라도 처

음 호소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려고 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제안하려는 노력도 하게 된다. 촛불항쟁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탄핵을 발의한 것, 촛불 시위를 제안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었을까?

대중의 자발성은 그것을 일관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응집력 있는 조직, 올바른 전략과 결합할 때 사회를 바꿀 막강한 힘이 된다.

나는 어떻게 '촛불 소녀'에서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2008년 촛불의 물결은 평범한 한 고등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엄청난 경험이었다. 촛불항쟁은 사회적 의식이 전무하던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눈을 뜨고 행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학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던 정치적 언어와 역사적 진실을 거리에서 접할 수 있었다. 거리와 투쟁 현장에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과 신념을 형성할 수 있었고, 나의 주된 관심사와 실천의 범위가 넓어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내가 촛불항쟁을 경험하고 바로 급진적 대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당시 촛불항쟁은 그 성과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하지 못한 한계들로 동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맞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촛불항쟁의 의의와 한계를 정치적 언어로 설명하고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는 좌파단체를 만났더라면, 나는

좀 더 일찍 사회주의자가 됐는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는 촛불항쟁에서 급진화한 대중과 토론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좌파는 극히 드물었다. 게다가 많은 좌파 단체들이 촛불과 소통하지 않고 폄하하는 것을 보며 나는 은연중에 좌파 단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그 뒤에도 나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나 의회민주주의로 협소하게 여겼고, 국가나 자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했다. 그러다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을 겪으며 국가와 자본의 본질을 깨달았다.

각종 악법 날치기와 한미FTA 반대 투쟁은 의회민주주의의 한계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게 했다. 특히 한미FTA 반대 투쟁 당시 나는 스스로 사회민주주의자라고 규정했기에 정치적 정체성 혼란을 꽤나 크게 겪었다.

그러나 사회 변화는 의회나 국가기구

를 인수해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투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뒤부터 더 급진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 온라인에서 <레프트21> 기사를 접했고,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과 토론하면서 노동자연대다함께에 가입하게 됐다. 촛불항쟁으로 시작한 다양한 사상적 조류를 접하고 경험하면서 결국 사회주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5년 전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며 현재는 사회주의자로서, 노동자들의 투쟁과 대중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진보적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진보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실천 속에서 입증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에게 혁명적 대안을 설득하고, 정치적 성장을 가능케 해 준 든든한 동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정은



2008년 촛불항쟁 당시 행진을 지도하고 있는 김광일 동지.

마지막 촛불 수배자에게 자유를!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탄압하며 이 운동에 헌신한 활동가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김광일 동지와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박원석 씨(당시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촛불 수배자 7인은 1백 일 넘게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후 나머지 수배자들은 모두 체포됐다가 석방됐고, 김광일 동

지는 마지막 촛불 수배자로 남아 있다.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전관 예우, 탈세 등 오물 범법인자들은 버젓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당한 촛불과 함께한 김광일 동지는 왜 힘겨운 수배 생활을 이어 가야 하는가. 김광일 동지 수배는 당장 해제돼야 한다.

김지윤

진보의 대안 논쟁

유로존 위기에서 부여잡을 고리는 무엇인가

2010년에 시작한 유로존 위기가 벌써 4년째다. 최근 키프로스 위기에서 보듯 위기는 끝날 기미가 없다. 그리스 경제는 몇 년째 내리 수축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더 크고 중요한 경제도 위기다. 이런 심각한 위기는 강력한 저항을 불렀고, 그에 따라 정치 위기도 깊어졌다.

깊은 위기에 빠진 유럽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악한 고리” 중 하나다. 그만큼 유로존 위기와 저항은 국제 좌파에 중요한 쟁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에서도 유로존 위기를 다룬 《위기·반란·대안》(책세상)이 발간됐다. 이 책을 엮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국역한 흥기빈 씨가 소장으로 있고 장석준 진보신당 부대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위기·반란·대안》은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투쟁과 대안을 다룬 흥미로운 글들을 담았다. 한편, 수록된 글들에서는 악점과 한계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살펴본다.

차승일

많은 사람들이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금융이 과도하게 팽창한 데서 찾는다. 《위기·반란·대안》에서 장진호 교수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기에 가까워진” 증권화라는 금융혁명이 무책임한 대출과 위험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주범이었다. ...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 부채의 사회화’는 공공 부채와 재정 적자로 전환되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유로존 위기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금융이 위기 촉발에서 한 구실을 강조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의 구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거품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원인을 봐야 한다. 즉,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고질 병이라고 말한 이윤율(투자 대비 이윤의 양) 저하 문제가 금융 거품의 밑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이윤율은 1980년대에 저점을 친 이후로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윤율 저하와 금융 팽창

이윤율이 낮은 상태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공격했고, 닥치는 대로 대안적 투자처를 찾아 나섰다. 그중 하나가 금융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조셉 추나라가 지적했듯이,

“금융 팽창은 기껏해야 위기를 지연시키는 ‘상쇄 경향’에 불과하며, 그 효과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 같은 단기적 처방의 대가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 확대, 중미 간 무역 불균형과 금융 불균형의 증가, 엄청난 규모의 거품 형성 등 엄청난 경제적 불균형으로 되돌아왔다. 바로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 지연된 위기가 터지자 그 충격은 가공할 만한 속도와 파괴력으로 세계 곳곳을 강타한 것이다.”

요컨대, 지금의 위기는 단지 금융의 위기가 아니라 낮은 이윤율로 말미암은 자본주의의 체제 자체의 위기인 것이다.

유럽연합과 유로존을 지켜야 할까

유로존 탈퇴를 지지하지 않는 일부 좌파의 관점에는 유럽연합과 노동자 국제주의*를 혼동하는 오류가 있다.

예컨대, 유류코뮤니즘* 경향인 시나스 피스모스가 주도하는 시리자는 유럽연합이 국민국가보다 국제주의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본다. 장석준 동지도 “유로존 탈퇴는 유럽 통화 연합의 해체로 이어[져] ... 국제 연대를 위한 노력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비슷한 견해를 비친다.

그러나 유럽 통합은 처음부터 유럽 자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장 규제가 철폐돼 유럽 노동자들은 더 많이 착취 당했다.

게다가 유럽 자본가들은 동아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끼어 있는 처지였다. 단적으로, 동아시아와 미국 노동자들은 프랑스나 독일 노동자들보다 적어도 연 3백 시간을 더 일한다. 유럽 자본가들은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복지에 쓴다는 것을 약점으로 여겼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이미 2007년에 쓴 논문에서 마치 예언자처럼 다음의 전망을 내놨다.

“유럽 자본은 샌드위치 신세가 될까 갈수록 초조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에 있는 자본의 친구들이 갈수록 기를 쓰고 복지 해택, 연금, 노동시간,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 이런 시도는 유럽에서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한 거대한 규모의 계급투쟁을 촉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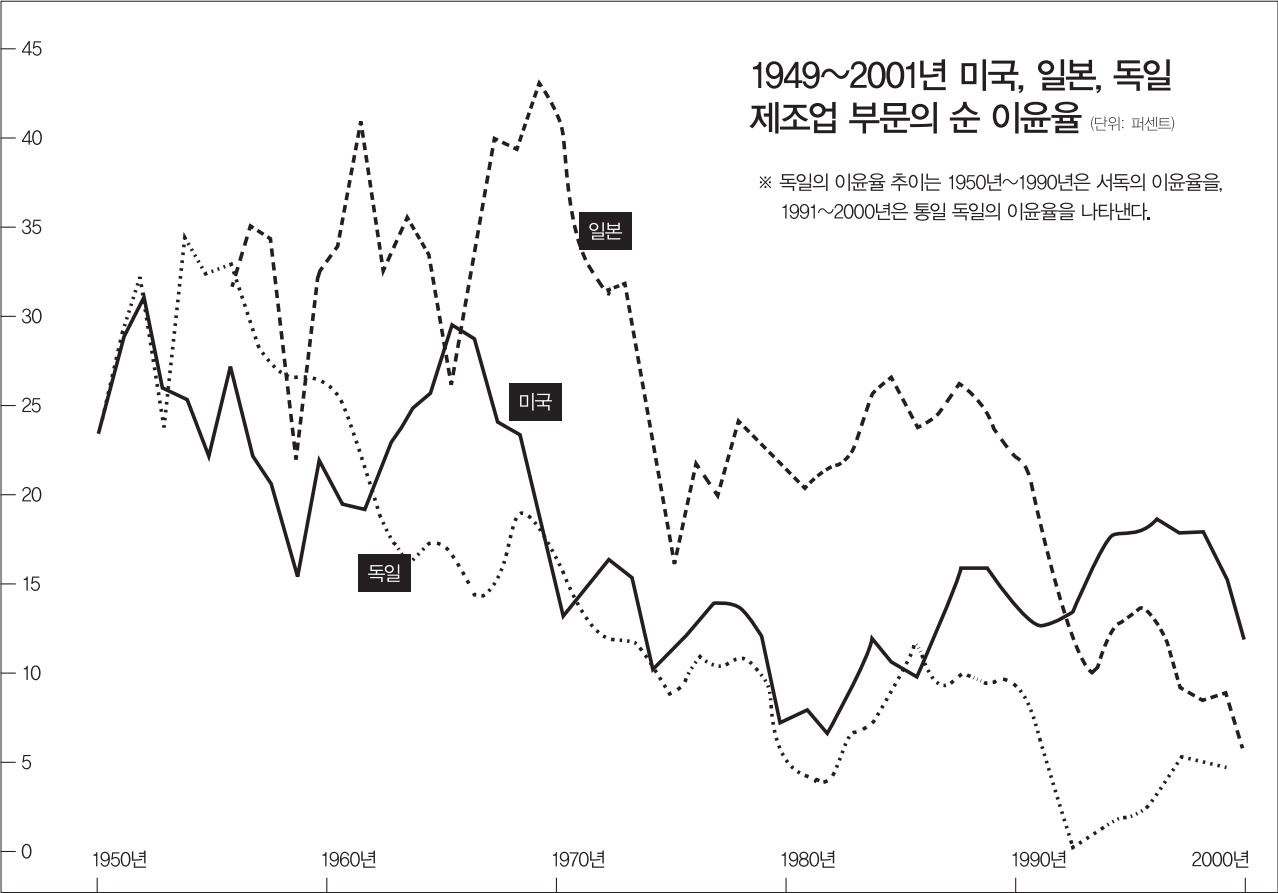
실제로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로 대표되는 유럽 지배자들은 위기에 빠진 나라들에 ‘구제’ 금융을 주면서 혹독한 긴축을 강요했다.

그러나 긴축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뿐이라는 게 지난 몇 년간 드러났다. 이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케인스주의* 대안이 힘을 얻었다. 그 핵심은 정부가 나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반란·대안》에 수록된 스튜어트 홀랜드 교수의 유럽연합 채권 발행 주장도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유로존 민중의 삶을 옥죄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의 위기는 돈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돈을 쏟아부어도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케인스주의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케인스주의 정책이 아니라 제2차세계 대전이라는 파괴와 살육 속에 ‘해결’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와 달리 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체 안타르시아와 여기에 속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EK)이 내놓은 ‘아래로부터



금융 팽창의 배경이 된 낮은 이윤율 현재 위기는 특정 형태나 부분이 아닌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다.

터 채무불이행’이 더 나은 대안이다.

‘아래로부터 채무불이행’은 은행들을 ‘구제’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주도해서 부채 상환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그리스 정부는 이자 지급에만 그리스 공무원 전체 임금보다 많은 돈을 쓴다. 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멈춘다면, 학교나 병원을 폐쇄할 필요도, 임금과 연금을 삭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대안이 실현되면 그리스 자본가와 유럽 지배자 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쫓겨나고 부자들은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려 할 것이다(따라서 은행 국유화와 자본 통제가 필수다).

그럼에도 긴축 정책에서 벗어남으로써 이후 반자본주의 투쟁의 심화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 크게 성공한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를 포함한 많은 논자들은 긴축을 반대하면서도 유로존 탈퇴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면 물가가 오르고 실질임금이 하락해 오히려 민중에 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2년 그리스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백56퍼센트를 기록했다. 가입 조건으로 정부 부채를 GDP 대비 60퍼센트 내로 억제하라고 요구하는 유로존에 남아 있으면서 긴축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정상화 vs. 사회 변혁 촉진

지금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곳곳에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두고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우리의 요구는 신자유주의나 금융만 문제 삼으며 자본주의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방안이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방어할 수 있고, 운동이 발전할 수 있고,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가능성을 촉진할 방안이어야 한다.

더구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했듯이, 이런 “정책을 현실로 바꿀 만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능력이 없으면 말짱 황”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이윤에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는 노동계급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위기·반란·대안》은 스페인 광

시리자가 좌파의 대안 모델이라는 주장의 허점

지난해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제적으로 좌파의 관심과 기대를 사로잡았다.

시리자에 큰 기대를 거는 좌파들의 정서는 2000년대 초 유럽 곳곳에서 시도한 급진좌파 연합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상황과 관계 있는 듯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시리자 같은 급진좌파의 성장을 환영한다. 급진좌파의 성장은 반긴축 정서가 얼마나 광범한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좌파는 더 나아가 시리자 같은 법좌파 정당이면 충분하고, 독자적 혁명정당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리자는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보다 좌파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좌파 개혁주의의 한계가 있다. 즉,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제약하려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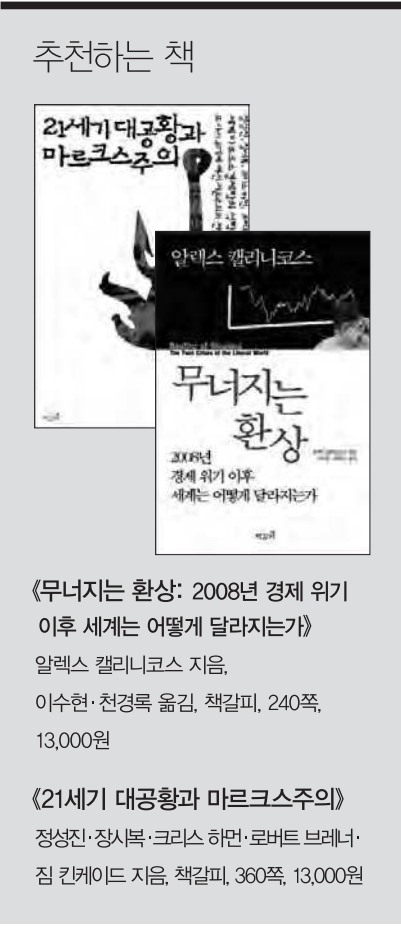
는 개혁주의의 특징을 공유한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시리자는 거듭 우경화했다. 5월 선거 때는 ‘유럽연합이 강요한 긴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하다가 6월 선거 때는 ‘트로이카와의 협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최근에도 시리자는 투쟁보다는 정치적 변화, 즉 새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운동에서 제기되는 급진적 행동과 거리를 둔다.

시리자 대표 치프라스가 유럽 지배자들을 만나 안심시키려 애쓴 것,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과도 공조하는 독립 그리스당 대표를 만나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 등이 그 사례들이다.

나치를 물리치고 반긴축 투쟁을 성장시켜 운동이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향하도록 하려면 독자적인 혁명적 좌파 조직이 필요하다.



《무너지는 환상: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이수현·천경록 옮김, 책갈피, 240쪽,
13,000원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정성진·장시복·크리스 하먼·로버트 브레너·
짐 킨케이드 지음, 책갈피, 360쪽, 13,000원



케인스주의

정부 지출로 수요를 늘리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

시리자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 좌파 개혁주의 연합체. 현재 가장 큰 야당이다.

유류코뮤니즘

서유럽 공산당들이 1970년대부터 소련과 거리를 두고 혁명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 사회를 바꾼다며 주창한 이념.

국제주의

노동자들이 국적을 떠나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

장 점거 운동 등에서 나타난 운동 형태에 주목하며 노동계급의 중요성은 주목하지 않는다.

광장 점거 운동 같은 거리 시위가 반긴축 운동의 성장에서 한몫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노동계급 고유의 힘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투쟁이 가장 격렬한 그리스에서 긴축을 추진하는 정부를 계속해서 위기에 빠뜨리고 사회 급진화를 추동한 것은 수십 차례 일어난 노동자 총파업이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노동계급은 누구고 왜 중요한가?

김인수

정치인·언론인·학자 등은 계급이란 무엇인지 우리를 헛갈리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가 엘리트, 중산층, ‘노동귀족’, 서민, ‘프레카리아트’ 등 다양한 ‘계급’으로 나뉘었다고 말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도 말한다. 집과 자가용이 있는지 없는지,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같은 기준으로 계급이 나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을 사회적 생산에서 나타나는 사회 관계라고 규정한다. 이와 달리, 칼 마르크스는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계급이 지배계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장 등을 그저 갖고 있지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해, 노동 생산물의 가치보다 더 적은 돈을 임금으로 지불해서 이윤을 만들어 낸다. 노동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는 서로 대립한다.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에게서 가치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 하지만 노동계급은 보통 이에 반대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이 계급 사회의 핵심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까지의 역사는 모두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다. 계급투쟁은 소소한 일을 둘러싸고도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업무 중 휴식 시간이나 구내 식당의 위생 상태 같은 문제를 두고 일어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이런 투쟁을 발전시켜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고용 형태, 소득 수준, 소비 취

향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관점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물론 유력한 사람들과 연줄을 맺거나 소위 ‘고급’ 문화를 즐기는 것은 계급과 아무 상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 분화의 결과이지 계급을 규정하는 근본 요소는 아니다. 독일 철학자 허버트 마르크제는 1965년에 생활 양식 변화로 노동계급이 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좋은 옷, 음식으로 꽉 찬 냉장고, TV 세트, 자동차, 집 같은 것들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체제를 타도하는 것이 그리 중요할까?” 프랑스 사상가 앙드레 고르는 최근 한국에도 출판된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이라는 책에서 자동화, 직무 분담 등 때문에 계급 분화의 본질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전통적 노동계급”이 사라졌다는 말이다. **고정불변?** 그러나 계급은 언제나 고정불변의 형태를 띠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생산의 지속적 혁신과 그에 따른 고용 형태 변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태생적 특징이다. 19세기 초 방직기가 물레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방직기도 새로운 생산수단에 의해 대체됐다. 오래된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했다. 그러나 생산수단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여전히 소수가 다수를 착취했다. 노동계급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많아졌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는] 이제껏 고귀했던 모든 직업의 후광을 벗겨 냈다. 자본주의는 물리학자, 변호사, 신부, 시인, 과학자를 임금노동자로 바꾸었다.” 이런 변화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노동계급” 지난해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

프레카리아트는 새로운 계급인가

어떤 사람들은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으로 이뤄진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좌파는 전통적 조직 노동계급과 다른 새로운 계급이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경제 위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가 이전보다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청년 실업자가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다른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조직 노동계급 바깥에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장들이 어떻게 “산업예비군”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공포를 부추기고 저항을 단속하는지를 묘사했다. 흔히들 프레카리아트의 범주 안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계산원,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을 넣는다. 그러나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무자들이 전일제 근무를 하는 교사나 버스 운전사와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다. 지배자들은 노동계급 사이에도 이해관계의 분단선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간질한다. 그러나 그런 분열 시도가말로 노동계급이 왜 저들에 맞서 단결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세계를 바꿀 잠재력을 품은 노동계급

노동계급의 힘은 핵심적으로 작업장에 집중돼 일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이윤 경쟁 충동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그들은 이윤을 낼 수가 없다. 공장과 사무실, 학교와 병원에 있는 조직 노동자들은 이윤의 흐름을 방해하고 체제 전체를 멈춰 버릴 힘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는 연금 생활자, 청

년 실업자처럼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체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실제로 싸움에 나서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촛불항쟁에서는 조직 노동자들의 고유한 힘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 덕분에 노동계급의 중요한 일부가 정치적 행동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런 운동들은 상상력 넘치는 재치와

창의력을 보여 줄 수 있고, 때로 지배자들에게 굴욕을 안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다. 산업정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운동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할 사회주의자는 없다. 그러나 때로는 수천,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서도 자본가들을 물리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오직 조직 노동자들의 힘이 있어야

만 승리할 수 있다. 독재자 무바라크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계속 전진하는 이집트 혁명은, 2011년 1월 타흐리르 광장에 뛰쳐나온 청년들의 시위로 시작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군대 투입에 맞서 영웅적으로 광장을 지켰는데도 무바라크가 사임을 거부했을 때, 기로에 선 혁명을 밀어붙인 것은 파업에 돌입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은 자본가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바로 이윤을 직접 타격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지배에 도전하게 되고 사회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노동자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억압과 착취와 부조리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능력과 규모와 조직을 갖춘 유일한 세력이다.

서평 | 《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국가 권력 기관 운영자들의 속 쓰린 행태를 책으로 펴냈다. 《국세청 파일》에서 그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의 문제를 드러냈다. 저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썼다. 차명계좌로 치밀하게 돈세탁을 하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국세청장 딸이 백화점 커피숍을 특별로 임차하는 등 수없는 사례를 통해 저자는 유기적으로 얽힌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가 아주 일상적임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2004년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 사건’이 있다. 신성해운은 비자금 수백억 원을 조성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뇌물을 써서 정관계 인맥을 동원

해 이를 무마했다. 신성해운이 쓴 로비 자금은 무려 1백 20억~1백30억 원이다. 로비스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낸 정상문의 사위 이재철이었다. 이재철은 로비 활동의 대가로 30억 원과 회사 지분 20퍼센트를 받기로 했다. 일이 완료된 뒤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이재철은 신성해운을 고발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구속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국세청 직원과 관련 정관계 인사들은 단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 로비 혐의를 받은 이재철의 장인 정상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2009년 신성해운을 포함한 해운업계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

왔다. 노동자들의 파업 어린 노동으로 만든 돈 수백억 원을 비자금으로 비축하고 로비 자금으로 기업이 인력 감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그뿐 아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영난에 빠진 신성해운을 포함한 해운업계에 8조 7천억 원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살린다는 명분이었다. 이 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세입 중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8.3퍼센트에서 2010년 53.1퍼센트로 해마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나라 살림의 절반이 넘는 돈을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간접세로 채운 것이다.

반면, 기업에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줬다. 기업경영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를 보면, 2012년 매출액 기준 국내 3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수익은 7조 2천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전년보다 1백억 원 넘게 줄었다. 수입은 증가했는데 세금은 오히려 적게 납부한 셈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 세금이 얼마나 부조리하게 걷히고 쓰이는지 알 수 있다. 즉, 세입의 절반은 불평등한 간접세로 채워진다. 그 돈을 공공 서비스와 복지에 쓰는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고, 기업을 살리는 데는 아낌없이 쓰인다. 기업을 살린 대가로 기업주는 살아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돼 거리로 내몰린다. 걷을 때도 불평등, 쓸 때도 불평등이다.

국세청을 감시하고 압박해 세무조사를 갈날을 휘두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정관계 인맥을 이용해 국세청장을 비롯해 수많은 간부급 공무원을 매수한다.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 사건’의 중심에도 이명박이 임명한 국세청장 한상률이 있었다. 이 사회의 세금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통제하는 사회가 필요하다.

심호철



《국세청 파일》
한상진 지음, 보이스,
328쪽, 14,000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5월 8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남원의료원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월 13일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 이행, 근무조건 개선,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와 계약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민주통합당 전라북도지사 김완주가 2009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남원의료원장 정석구는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반납과 임금 동결을 강요했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남원의료원은 지방의료원 34곳 중 김천의료원과 함께 최악의 경영 성과를 달성했다.

남원의료원 노조가 체불임금 지급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정석구는 입원 중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을 고용해 ‘강성노조’가 의료원 경영난을 낳은 것처럼 몰아세웠다.

정석구는 1월에 노동조합의 투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공공병원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

과 지역대책위의 압력에 밀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최근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쇄를 추진하자 자신감을 얻어 다시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남원의료원 노동조합은 다시 투쟁

에 나섰다.

남원의료원의 재정도 진주의료원처럼 적자다. 그러나 적자는 대부분 1999년 병원 신축과 이전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경상운영비 평균은 연간 8억 3천만 원이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다 합쳐 고작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운영되기 어렵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지역 주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병원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와 가난한 환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자들에 맞서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변해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이화여대

기업 행사는 도와주고, 진보적 강연은 탄압하는 학교 당국

3월 초,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소속 이화여대 학생들은 소속 단체 주최로 이화여대에서 새 내기 맞이 정치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다. 이 행사는 사노위 이대모임이 주관하고 동아리연합회가 후원했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이 행사가 명백히 이화여대 학생들이 여는 행사임에도 ‘외부 단체 행사라며 공간 사용을 불허했다. 사노위 이대모임과 동아리연합회는 이에 반발하며 예정된 장소에서 포럼을 열었다.

학교 측은 포럼 마지막 날, 강연장에 찾아와 학생들을 막무가내로 내쫓고 행사

를 방해했다. 이것도 모자라 한 달도 더 지난 지금, 당시 정당하게 항의한 동아리 연합회장을 징계하려고 한다.

학교가 장소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학내 진보 단체들의 행사를 탄압해 온 것은 하루 이를 일이 아니다. 학교 당국은 “외부 단체 행사여서 안 된다”,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아니다” 등 갖가지 이유를 낸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이중잣대다. 학교 입맛에 맞는 외부인 초청 행사와 기업 행사 같은 ‘외부 행사’들은 버젓이 열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연장’처럼, 한국 재

벌과 다국적기업들의 기득권을 변호하는 법률 기업도 학내 공간을 사용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행사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고 꺼내드는 최후의 무기는 ‘돈’이다. ‘외부 단체 연계 행사’는 대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관료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백80만 원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돈 많은 기업이 아니면 사실상 빌리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학교 당국은 한 학기에 4백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고도 학생들에게 동아리방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콩나물시루 같은 대형 강의 문제는 외면하고, 수천억 원의 적

국민대

취업을 낮은 학과는 축소하자?

4월 14일 국민대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취업을 이 높은 학과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나 학부(대부분 문과대, 사회과학대, 예술대학, 법과대학 소속)의 신입생 정원을 조금씩 줄인다. 2)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 80여 명을 배정한다. 3) 일부 학과의 구조를 재편한다. 신설 학과는 ‘자동차IT융합학과’, ‘파인앤스보험경영학과’, ‘수송기디자인학과’ 등이다.

즉, 기업 입맛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고 지원하면서 취업률이 낮은 기초학문 교육은 줄이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시험 기간에 일방적으로 고지했다. 학교 웹사이트에 공지하고는 ‘22일까지 메일로 의견을 달라’가 전부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기초학문의 축소가 가속화할 것이고, 학과 간 취업을 경쟁도 강화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은 학교 측에 이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를 열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공청

회는 이 개정안의 문제를 들춰내고 학칙 개정 반대 운동을 건설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기업 입맛에 따라 대학을 재편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에 구조조정 압력을 넣어 왔다.

대학들도 이런 요구에 호응하며 비민주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는 무려 11개 과를 없애려 했고, 최종 6개 과를 없애고 8개 과를 통폐합했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대 당국도 얼마 전 법무학과를 폐지하려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는 KIS(KMU International School) 학부를 없앴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단지 구조조정 대상이 된 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학교에 맞서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권혁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

독자토론광장

5월 8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경상대

장학금 차등 지급 전환 반대한다

경상대는 2010년부터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 30만 원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했다. 나 역시 그런 점을 알고 2012년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고, 한 달에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올해 BK21(두뇌한국21)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이 장학금이 2013년 1학기부터 7단계 트랙으로 차등화한 장학금 제도로 바뀌었다. 이전처럼 월 30만 원 장학금에 해당하는 트랙 1, 2는 지도교수별로 1명만 추천할 수 있어서,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 수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학술지 논문 게재와 같은 실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학교 측은 전환 이유로 재정 부족을 말한다. 그러나 전업 대학원생이 4백50명 정도인 상황에서 실제 부족한 금액은 4억 원이다. 한 교수님에 따르면 4억 원 정도면 “총

장님이 직접 전화 한통 걸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조차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학원생들을 지원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대학원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학금 차등화 지침 해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많은 대학원생들을 만나면서 실제 요구사항이 ‘균등한 장학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차별적 장학금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이때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정성진 교수님 등 일부 교수님들이 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휴강을 해 주시기도 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실험과 조사·잡무가 많은 과 학생들은 교수에게서 할당받는 일의 양은 동일한데 왜 장학금은 차별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한편,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원우회(대학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불만

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 원우회는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의 동등 지급 지침에서 차등 지급 지침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지급되는 장학 금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대학원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41개 과 대학원생 1백72명과 37개 학과 대표자가, ‘원우회는 대표성을 상실했고 ‘전체 대표자 회의’가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에 동의 서명을 했고 앞으로 ‘전체 대표자 회의’가 장학금 관련 협상과 업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원우회는 압력을 받아 지금은 ‘설문조사를 통해 차등 지급에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면 함께 하겠다’고 하고 있다.

나는 대책위원회와 함께 균등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김재원 국립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장학금 차등화 지침 해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서울 남부지구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한국현대사 속의 한미동맹

연사 : 한규환(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 전공)
일시 : 5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모임공간 드림드림(강남역 11번 출구에서 3분 거리)
참가비 : 3,000원(학생 2,000원)
문의 : 010-9401-1370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서부지구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연사 : 김인수(레프트21) 국제 담당 기자
일시 : 5월 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공간 여성과 일’ 지하교육장(한국여성노동자회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직진, SC제일은행 뒤편)
참가비 : 3,000원(학생·청소년 2,000원)
문의 : 010-7725-9823(문자도 환영)

인천 지희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대안은 있는가? —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연사 : 이정구(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5월 24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인천본부 교육장(가1호선 부평역 인근)
참가비 : 2,000원(학생, 청소년 할인 1,000원)
문의 : 010-2816-7181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장호중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기를 한 달가량 미루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도 폐업 조례안 처리를 비슷한 시점으로 미룰 듯하다.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7명이 목숨을 잃고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자 시간 벌기에 나선 듯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는 갈 곳 없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 목숨을 잃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자다. 당대표 시절 한미FTA도 날치기로 밀어붙인 주범이다. 홍준표는 “한 달간의 대화는 정상화, 폐업 등 모든 것을 다 열어둔 대화”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가 밝힌 것처럼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에 대한 조사와 치료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현재 진주의료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가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의료원은 사실상 폐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홍준표는 이렇게 시간을 끌면 노동자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을 것이다.

우파 리더

홍준표가 진료를 중단시킨 뒤 병원을 떠난 환자 1백92명 중에 65명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나머지는 고통을 참거나 죽을 날만 기다리며 집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담당 주치의들마저 떠나버려 병원에 남겨진 환자 9명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토록 끔찍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홍준표는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영호남에서 모여든 노동자 수백 명이 도의회를 에워싸 조례안 상정을 무산시킨 뒤에도 하루 만에 도의회를 소집하며 폐업을 밀어붙이려 했다.

우파의 리더로 떠오르고 싶어 하는 홍준표는 진작부터 보편적 복지를 ‘사회적 약탈 행위’라고 비난해 왔다.

우파들이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것은 단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면 복지 확대 요구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줬다. 집권 초기부터 복지 ‘먹튀’라는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분위기를 바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박근혜는 지킬 생각도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을 때조차 보편적 복지에 반대해 선별적 복지론을 고수해 왔다. 당선인 시절에도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부분을 철저히 막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는 최근 기업들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도 속도와 폭을 조절하라고 했다. 복지 ‘먹튀’로

낙후한 저소득층 ‘전문’ 병원이 아니라, 최신 시설에 비용도 저렴한 공공병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병원을 이용할 것이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와 기대도 늘어날 것이다.

반대로 이런 공공병원들이 사라지면 민간병원들과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들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기업주들의 이윤이 늘어나고 시장 논리가 힘을 받기 때문이다.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나머지 대부분에게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지우면 노동계급 내에 분열도 조장된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없게 만든다.

홍준표는 이런 그림 속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밀어붙여 왔다.

이런 공격에 성공하면 깊어가는 경제 위기하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사영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준표가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명분으로 삼은 까닭이다. 최근에는 “공공의료는 박정희 시절에 도입한 좌파정책”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며 공세를 지속했다.

도 모자라 아예 기업주·부자들의 특권을 건드릴 생각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은 이런 흐름에 부응해 진주의료원 문제에서 아예 손을 뗐다.

이처럼 홍준표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박근혜가 은근히 밀어주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진주의료원뿐 아니라 전체 복지의 향방을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홍준표를 막을 수 있다면 집권 초기부터 위기에 직면해 온 박근혜 정권의 위기도 가속될 것이다.

▶ 관련기사 9면



“홍준표의 공공의료 파괴 질주를 막자”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전체 복지의 향방을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이다. 4월 16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

마르크스

MARXISM

2013

2013년 7월 19일(금) - 22일(월)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참가신청 · 문의 : www.marxism.or.kr, 02-2271-2395, 010-48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김수행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김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최일봉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정성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경성대학교 교수

존 몰리뉴

영국과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이자 아일랜드 사회주의 사상 잡지 (아이리시 워커스 리뷰)의 편집자다. 또, 아일랜드 좌파 정당과 세력들의 선거연합체인 '좌파연합'에서 활동했다. 국내에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조선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등이 번역 출판돼 있다.

● 애플과 구글의 자본주의 ● 마르크스주의 철학 ●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등을 연설할 예정이다.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 박근혜 정부와 진보 운동 ● 반자본주의 대안과 전략 ● 오늘날 레닌주의 논쟁 ● 노동계급과 노동자 투쟁 ● 경제 위기 ● 오늘날 유럽의 상황 ● 환경 위기 ● 다른 교육, 다른 학교는 무엇인가? ● 여성 차별과 마르크스주의 ● 성소수자 해방 운동 ● 이주와 인종차별 등과 관련해 50여 개의 워크숍들이 개설됩니다. ● 임시이웃(www.tempis.or.kr)에 연사와 주제들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 임시이웃에서 지난해 임시집시 시간표도 참고해 보세요.